조계종 사찰 60% 소임공제 이용

종교인과세 시행 1년, 승려 4265명 소득 신고

종교인과세가 시행된 지 1년이 흐른 현재, 불교계 장자종단 조계종은 전체 사찰 중 60%가량이 종단 재무부를 통해 소임공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에 따르면 2018년 소임공제 신청 사찰은 총 2853곳 중 1648곳으로 집계됐다. 공찰은 695곳, 사설사암은 953곳이었다. 또한 1년간 4265명의 스님들이 재무부를 통해 소임공제를 했다. 여기에는 고정급여 형태의 보시금뿐만 아니라 강연비 등 1회성 기타소득도 포함된다. 재무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득을 신고하는 일부 사찰과 스님을 포함하면 소득신고율은 60% 수준인 것으로 재무부는 보고 있다.

재무부에 따르면 과세 · 비과세 포함 2018년 국세청 신고 총액은 574억여 원이다. 소득세액은 약 4억3100만원. 개인으로 구분했을 때는 4265명 중 약 51%가 연간 1200만원 미만 소득자였다. 특히 연간 6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얻은 스님들은 28%(119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1800만원 미만 기준 시에는 71%였다. 2400~3000만원은 292명(6.85%), 3000만원 이상은 340명(7.97%)으로 나타났다.

재무부 관계자는 "종교인과세와 관련해 연간 소득 1200만원 이하인 스님들에게는 소득세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신고액 대비 납부 소득세가 적을 수밖에 없다"며 "국세청 문의결과 올해부터는 출장비를 신고 대상에 넣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확인했다. 현재는 회의비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무부는 종교인과세 제도 개선을 위해 스님들의 법문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문 자체가 불교 고유의 활동인데다 일반사회의 강연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이유에서다.

재무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법문을 강연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 법문은 시간당 일정 보수를 받는 강연과 다르고, 법문비 역시 예경의 의미를 담고 있어 과세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종교의 이해 부족"이라며 "개신교의 경우 A목사가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받는 금액은 소속이 달라 과세대상이 된다. 하지만 스님들은 하나의 조계종 소속이기에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스님, 국민연금 가입하세요"

승려복지회, 올해부터 보험료 전액 지원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승려복지제도가 꾸준히 확대되면서 올해부터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 모두에게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이에 현재 1800명 수준인 가입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조계종 승려복지회는 또한 예방접종비 · 간병비 지원 등 다양한 승려복지제도를 마련, 한해 동안 개인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승려복지회는 2017년부터 매년 국민연금보험료를 확대 지원해왔다. 2017년 1만800원, 2018년 1만8000원에 이어 올해는 보험료 전액인 3만6000원을 지원한다. 국민연금은 노후 준비가 일반인에 비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출가수행자의 소득보장에 필수적인 제도다. 이에 조계종은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납부예외자인 스님들의 임의가입을 제도화했다.

올해부터 지원되는 보험료 전액 3만6000원은 스님들의 평균소득을 월 40만원으로 신고해 산출된 금액이다. 일반인 최저가입액 8만9100원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부담은 낮추고, 보장액은 높였다. 스님들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아 20년간 납부할 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월 약 28만원이다. 납부한 금액 대비 약 7.8배를 돌려받는 셈이다. 일반인이 최저가입액으로 20년간 납부해 받는 매월 약 34만원(3.8배)보다 보장률이 2배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 종단으로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 스님은 1770명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으로 볼 수 있는 55세 미만 비구 · 비구니가 6000명인 점을 감안할 때 비교적 적은 숫자다. 이에 승려복지회는 더 많은 스님들이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을 독려하는 한편, 개별 스님들이 가입한 복지서비스를 조사해 전산화 작업을 거쳐 각 교구본사와 공유할 계획이다.

박종학 승려복지회 사무국장은 "국가복지제도는 세부적으로 나누면 360개에 달한다. 하지만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서 "요양등급, 기초연금, 10.27법난 피해자 등 다양한 데이터를 정리해 스님들이 국가와 종단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승려복지회 올해 지원계획

국민연금보험료 전액
매월 3만6000원

정밀건강검진비
각 50만원(100명)

예방접종비 · 간병비
지원 규모 논의 중

지난해 1만8000원에 이어
올해 3만6000원씩 지원돼
현재 가입자 1770명 수준
"더 많은 스님들 혜택 받길"

승려복지회는 또한 지난해에 실시했지만 신청이 많지 않았던 정밀검진비 지원을 올해에도 추진한다. 정밀검진비 지원은 100명의 스님에게 각각 50만원씩 지원해 동국대 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와 함께 승려복지회는 올해 대상포진과 폐렴, 독감 등에 대한 예방접종비 지원도 논의 중이다.

이외에 승려 입원진료비뿐만 아니라 간병인이 필요한 스님들을 돕는 간병비 지원 제도도 올해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승려복지회에 따르면 현재 간병비 명목으로 모연된 후원금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과 기간, 금액 등을 정해 지원에 나선다.

승려복지회는 장기적으로 보훈처의 보훈복지사와 비슷한 개념의 '승보공양복지사' 제도를 구상하고 있다. 보훈복지사는 각 병원에 배치돼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직업으로, 보훈관련 서비스를 대상자들이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다. 이에 승려복지회는 승보공양복지사를 통해 스님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국가 · 종단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02)2011-1726



원행 스님(사진 가운데)과 정재숙 청장(오른쪽 네번째) 등 조계종 ·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예방 후 기념촬영한 모습.

"불교문화재 관리에 관심 가져달라"

원행 스님, 1월 31일 정재숙 청장 예방서 강조

"국가 유형문화재 60%가 불교문화재인데 불교계 문화재위원은 4%에 불과합니다. 불교문화재 관계자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 주길 바랍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월 31일 정재숙 문화재청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며 불교문화재 관리에 관심을 당부했다.

원행 스님은 "불교계 문화재위원은 전체 263명 중 11명에 불과하다"면서 "불교계 문화재위원에 대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면단위 문화재 관리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스님은 "700의총 하나 관리에만 몇십명의 인력이 투입된다"며 "국보, 보물을 수십 점 보유한 사찰에서는 스님들이 관리하지만, 이에 대한 관심도 적다. 점단위가 아닌 면단위 관리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재숙 청장은 "불교계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하겠다"고 화답하며 "문화유산을 보존 · 관리하는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조계종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신성민 기자

"감리 부실 우려되는 문화재 보수"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전문공무원 부재 문제제기

2018년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대해 민간보조사업자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를 모두 선정함에 따라 감리의 독립성 미확보 및 문화재 수리 감리 부실 우려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에 문화재청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조계종 각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지자체 일반공무원 가운데 전문가가 없어 감리 부실이 우려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감리 실무자가 임명되도록 종단이 정부와 대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원경)는 1월 28일 범어사 휴휴정사에서 제60차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본사 주지 스님들은 사찰문화재 정비에 전문성을 갖춘 실무자 선정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덕문 스님(화엄사 주지)은 "'감리'라는 말은 불사에 책임을 진다는 말이다. 문화재청이 지자체에 감리감독 선정을 맡기는 건 지자체가 불사 관련 최종 책임을 져야한다는 말"이라며 "하지만 지방자치제 공무원 가운데 문화재에 대한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어 부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제60차 회의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지자체 전문성이 담보되도록 종단이 정부와 대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불사 완료 후에 문화재를 소유하는 사찰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공사가 이뤄진 바도 있었다. 해결방법은 현재 소송밖에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감리비용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과 실질적인 공사비용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월우 스님(대흥사 주지)은 "감리비 선정 기준이 과거에는 3억 원에서 5억 원 미만이었는데 기준 적용도 흐지부지되다가 현재는 일관성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개선을 요청했다.

덕문 스님은 "감리 및 설계비용이 24%에 달한다"며 "그럼 실질적인 공사비용은 35~40%밖에 되지 않아 문화재 보수에는 크게 활용되지 않는다.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승려복지에 관한 회의에서 주지 및 국장 소임자의 복지 혜택이 이중 적용되는 점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승려복지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비구니 종회의원 2석 정현 · 운산 스님 추천

1월 30일 선원 · 강원 재선거

현재 공석인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의원 비구니의원 2석에 정현 스님(법룡사 주지)과 운산 스님(운문사 주지)이 후보로 선출됐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는 1월 30일 서울 일원동 전국비구니회관 1층 대강당서 제27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중앙종회의원 재선거를 실시해 정현 스님(선원)과 운산 스님(강원)을 후보로 선출했다. 전국비구니회는 지난해 제17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당시 10명의 후보를 선출하려 했으나 서류미비 등 문제가 발생해 총 8명의 후보만을 종단에 추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17대 중앙종회는 지난해 11월 정원 81명이 아닌 79명으로 개원했다.

이번 재선거에서는 선원 부문에 정현 스님이 단독으로 입후보해 무투표로 당선됐다. 강원 부문에는 효탄 스님과 운산 스님이 입후보했으며, 투표 결과 운산 스님이 54표를 얻어 종회의원 후보로 선출됐다. 투표에는 운영위원 총 82명이 참여했다.

윤호섭 기자



신비스런 불교왕국 부탄



파루-팀푸-푸나카-파로

마하연 특별기획



백두산 성지순례
4박5일 북파+서파

티베트 8일 성지순례



인천-서안-라싸-얌드록쵸-장체-시가체-라싸-칭짱열차-서안-인천



인도 8대 성지순례 11일
사르나트-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쉬라바스티-상카시아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야-플론나루와-담불라-캔디-콜롬보

태국 3박5일
방콕-아유타야-파타야-방콕



라오스/베트남 6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6일
하롱베이-씨엠립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엔